

김정은 정권 평가와 전망

김갑식 박사(통일연구원)

1. 김정은의 집권구상

□ 김정은 북한구상 배경

-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반감(?)
 - 여자문제, 부성애 부족, 비정상적 사회주의 등
-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
 - 중국사회주의 발전과 리비아 카다피 몰락
- “사회주의다운 사회주의를 만들고 싶다”
 - ‘군 중심의 비상관리체제’ 마감, 당국가체제 정상화
 - 동방의 핵강국,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+ 먹는 문제 해결 → 사회주의 강국 건설

□ ‘김정은 북한구상’ → ‘자주의 길, 선군의 길, 사회주의 길’ 계승

- 重義的 의미: 자주(김일성), 선군(김정일), 사회주의(김정은)가 각각 시대 의미 또는 세 가지가 함께 三代를 관통하는 의미
- 김정은의 ‘時間’(긴 호흡): 최소 30년
- 단기(12-16): 김정은 권력승계 안정화
 - 세대교체·세력교체 등 엘리트 支持기반 마련, 최소한의 경제 유지
 - 핵기술 및 군사력 발전을 통한 장기집권의 토대 마련
- 중기(16-25): 김정은式 사회주의 본격 추진
 -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북한구상 제시, ‘자기 정치’ 본격화
 - 핵보유 기정사실화, 평화협정 체결 및 대외관계 개선, 경제성과 도출

- 장기(25-40):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및 북한주도 통일 모색
 - 핵강국,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로 장기통치
 - 체제경쟁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북한주도 통일 모색 가능성

2. 김정은의 체제운영전략

<김정일의 체제운영전략>

- ✓ 선군지배연합으로 체제위기 돌파
- ✓ 내핍·희생담론 반복생산 및 희생양 정치로 대내통제
- ✓ 국방공업 선도발전을 통해 경제전반 성장 추진
- ✓ 시장 방임 및 통제를 주기적 전환, 경제적 다원화 현상 차단
- ✓ 2012년 사회주의강성대국 진입 목표 설정
- ✓ 협상을 통한 확산: 협상력으로서의 핵 → 핵보유국 인정 투쟁
- ✓ 대남 경제, 대미 안보 추구
- ✓ 민족성·평화공존, 통일은 장기적 과제

- ‘핵보유국가’ 기정사실화를 통한 정치·군사적 안보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추진
- 경제·핵무력 병진노선, 자강력 제일주의, 선군혁명노선 등 항구적 전략적 노선화
- 이란·쿠바와는 달리 분단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‘핵포기=흡수통일’이라는 강박관념
- 핵개발 이후 1970년대 안보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 경험 (양탄일성) 벤치마킹 가능성
- 김정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(당-핵무력 우위) 지배연합을 유지하면서, 향후 주민 지지 획득하기 위한 경제개선조치 도모
- 권력엘리트에 대한 공포정치와 철저한 통제, 주민에 대한 동원체제 구축과 생활 향상을 통해 유일지배체제 강화

- 사회주의문명국, 인민생활향상 등에 보다 치중
 - 연소함을 발전가능성으로 포장한 청년이미지 강화
- 외화벌이 독려와 시장에 대한 전향적 조치
 - 광물 수출 및 노동력 해외 송출
 - 시장에 대한 전향적 정책과 시장의존적 국가경제운영 불가피
- ‘군 중심의 비상관리체제’ 공식적 종료, 당국가체제 정상화 돌입
- 당을 통한 통치,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
- 견제와 균형의 엘리트 구조
 - 당관료 중심 정무국 vs. 병진노선·공안기구 중심 군사위
- 국방위원회 폐지, 국무위원회 신설
 - 국무위원회를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핵심 인사들로 구성
 - 김정은이 국무위원회를 통해 통일·외교·경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을 통할하겠다는 의지, 국무위원회를 통해 당적 영도를 국가기관에서 집행
- ‘국가성’ 강화를 통해 흡수통일 차단 및 독자 생존(통일 거부) 모색
- 남한의 통일준비에 대해 북한 내부적으로 국가성 강조
 - 표준시 변경, ‘대한민국’ 호칭, 남북관계 관련 ‘외무성’ 성명 증가, 국가담론 강화, 국가기구에 조평통 설치 등
- ‘통일’보다 ‘분단관리’에 집중, 하지만 적화통일(통일대전) 未포기
- 혁명발전단계 재조정으로 정책추진의 현실성 제고
- “사회주의강국 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·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”이라고 주장
- ‘김일성·김정일주의화’를 혁명의 최종단계로, ‘사회주의강국’을 최종단계로 가는 일종의 과정적 단계

- ‘사회주의강국 건설’을 두 단계로 구분해 1단계는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, 2단계는 기존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 단계로 설정
 - 중국의 ‘사회주의 초급단계론’과 같은 모종의 혁명단계 수정 가능성

<표 1> 김정일-김정은 정권의 체제운영전략 비교

구분	김정일 정권	김정은 정권
정치분야	先軍政治	黨중심 정치 + 嚴幹寬民(공포정치)·愛民리더십
경제분야	방임적 시장화	食문제 해결(혼합경제) + 자강력 제일주의
대남분야	남북협력으로 경제회복	(名目)통일강국 + (實質)분단관리
대외분야	핵협상으로 위기관리	핵보유국 + 대외관계 개선

3. 공포정치와 주민착취 강화¹⁾

□ 북한의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두 가지 고리는 공포정치와 부패

- 폭력과 억압을 통한 공포정치는 젊은 지도자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폭력적 기제
 - 김정은 집권 이후 감시·통제·억압 기구인 국가보위성, 인민보안성, 기동타격대, 각종 ‘상무조’ 조직 등 상설·비상설 공안기구 가동 강화
 - 이들 기구들은 상층의 권력엘리트에 대한 숙청뿐만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감시·통제 활동

○ 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 유착을 도모하는 아래로부터의 기제

□ 권력엘리트 숙청·처형 및 주민소요 차단

- 북한의 공개처형은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30여 명에서 2016년 8월 까지 올해만 60여 명으로 대폭 증가

1) 홍민, “김정은 정권 통치형태의 특징과 인권 상황,” 통일연구원 제6차 사이버포럼 자료집 (2016.10.13)참조.

- 이러한 공포정치는 기본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확립하는 리더십 안보 차원에서 진행
- 대북제재와 경제고립이 심화되면 리더십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공포정치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 증가

○ 국경지역 탈북자 단속 강화

- 현재는 국경경비대, 인민보안성, 국가안전보위성 등 3중으로 탈북 통제

○ 주민 소요 진압을 위한 기동타격대 창설 운용

- 인민보안성 내무군 산하 기동타격대(또는 특별기동대)는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인 2009년 3월에 조직한 것으로 전언
- 기동타격대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주민들의 소요 및 시위 등 체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경우, 군의 개입에 앞서 1차적으로 주민들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상설적인 무장 전투경찰에 해당

□ 외화벌이 총력전과 주민 착취

○ 자원 수출 통한 외화 획득 노력의 지속

○ 무역 다각화 모색

○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 유치

○ 관광부문 활성화를 통한 외화획득 전략

- 중국 동북 3성을 겨냥한 ‘접경지역 관광활성화’ 주력

○ 해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착취

- 러시아, 쿠웨이트, 카타르, UAE, 오만 등
- 근로자 급여는 보통 월 1,000달러 정도인데 80-90%는 국가계획분(충성자금)으로 공제, 나머지 150-200달러만 개인에게 주는 게 일반적

□ 시장 시스템의 안착

○ 도시 건설시장 ‘붐’ 조성, 경기 활성화 효과

- 대규모 토목건설, 아파트 건설 등은 ‘사회주의문명국’의 성과로 선전되고 있지만, 시장의 민간자본과 국가가 결합해 만들어낸 일종의 ‘김정은식 경기부양’ 해당

○ 통일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집계한 2016년 현재 북한의 공식적이 시장 개수는 398개로 집계²⁾

- 여기에 비공식적인 장마당 및 상거래를 포함하면 그 개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

○ 김정은 체제의 시장화의 특성은 ‘3무 3다’

- 시장통제, 상인통제, 상품통제가 없어졌고,
- 써비차(벌이버스), 휴대전화, 개인소득이 많아졌음
- 핵무기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장화를 체제 안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,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것

○ 대북제재에 따른 국가의 시장 수탈 가능성

-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시장영역에 대한 국가의 약탈적 행위 등장
- 대북제재로 돈줄이 마르기 시작한 김정은 정권이 상납금을 올리거나 트집을 잡아 아예 돈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
- 일반적으로 공안 및 치안 기관들은 간첩이라는 혐의로 전 재산을 몰수하거나 바치도록 함

2) 홍민·김혁·정은이·차문석, 『북한 전국 시장정보』(가제) 2016년 12월 출간예정.

4.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

-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
 - 주민 차원: fear factor > anger factor
 - 엘리트 차원: 공포정치의 명암
 - 단기적 순종, 보신주의, 불안감에 따른 반발 가능성
- 체제안정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, 체제안정성과 체제지속성이 반드시 정합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
 - 아직까지는 수령제의 힘으로 권력엘리트 간, 권력기관 균열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상황
 - 그리고 정치적 일원화의 힘으로 경제적 다원화(시장의 활성화와 기능의 다양화)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